

데스크 시각



홍행기 경제부장

요즘 시중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생각보다 많은 이자에 놀라게 된다. 물론 일부 업체의 이야기고, 극단적인 경우 이긴 하지만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로만 50만 원을 내야하는 곳도 드물지 않다. 1년에 600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니 이자율만 연 60%인 셈이다. 물론 원금은 따로 갚아야 한다.

대부업체라지만, 국가에서 연 25%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은 안중에도 없다. 돈이 급한 서민들로서는 “이자자가 너무 비싸다”고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 “그나마 돈을 융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를 이르는 말이 바로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다. 돈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물려

약탈적 대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에서다. 대부업체로서는 최악의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자산을 팔아 빚을 회수하면 된다는 알팍한 계산 때문에 약탈적 대출에 나서게 된다.

서민 울리는 금융기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대출도 ‘약탈적’이긴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어쨌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원금과 이자만 받아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줄 때는 손쉬운 조건을 제시하며 입속의 허저림 굴다기도 대출금을 회수할 때는 혹독하게 재촉하는 게 약탈적 대출의 특징이다. 친절한 대출은 빚더미로 쌓게 하고 부채의 덫에 걸리게 하는 고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약탈적 대출이 일부 대부업체에 서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고리대부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1금융권이라 불리는 시중은행이 나서줘야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들도 제 역할을 수행 하기는커녕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데일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날씨 좋을 때 우산 빌려 줬다가 막상 비가 오면 우산 뺏는 것’이 은행이긴 하지만, 최근 이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정하는 걸 보면 ‘과연 이래도 좋은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A은행은 지난 9월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를 2.78%로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적용됐던 기준금리 3.16%에 비해 0.38%P가 내린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P 인 하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는 시중은행이 정하는 자체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은행은 지난 6월 0.15%였던 대출 가산금리를 9월에는 0.85%로 올렸다.

덕분에 A은행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최종 대출금리(신용등급 평균)는 지난 6월 3.31%에서 9월 3.63%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오히려 0.32%P가 더 올랐다.

정부도 사실상 공범

다른 은행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올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대출금리도 줄 것 이라고 기대했던 고객들만 우습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게다가 고객이 맡기는 예금

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크게 깎는 방법으로 수신금리를 내림으로써 고객에게 내줘야 할 이자부담을 줄이고 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법으로 고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슬그머니 제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서민들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무너지려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폭증하고 있지만, 이 대출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택구입이 아닌 생계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주택을 담보로 빚을 얻어야만 하는 서민들이 돈은 더 쉽게,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됐다지만 이자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주택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는 정부와, 수익에만 목을 매는 이기적인 금융기관이 합작하면서 힘들어진 것은 결국 대부분의 돈 앵는 국민뿐이다. 국민을 약탈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의 반성이 필요하다.

/redplane@kwangju.co.kr

社說

문화전당특별법 제정 반드시 성사시켜야

전면 개관을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전당의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채우고, 핵심인력을 뽑는 운영 주체가 아직 미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빚어질 개관 및 운영 차질은 심각하다. 건물은 대부분 지어졌지만 전당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기구가 없어 현재대로라면 정상 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개관이 내년도 9월4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첫걸음부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전당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운영 주체가 정부 소속이어야 한다고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박해자 의원(새정치연합·광주 서구갑)은 “국책사업인 만큼 위상을 지키고 재정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맡도록 하자”는 특별법안을 제출해 높은 상태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전당을 정부가 관할토록 하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생겨 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운영기관을 정부 산하에 두면 수익사업이 불가능해지고 문화행사 기획과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개관이 임박한 전당 운영기구와 관련해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애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뜻으로 출발한 문화전당을 지어만 놓고 제대로 굴러갈 때까지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국비사업의 취지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 대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선화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야당과 공조를 취하되 호남 출신 여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특별법이 성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구실 못하는 광주과학관 누가 찾겠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광주과학관이 제 구실을 못해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체험형 과학관’을 표방하며 문을 연 광주과학관은 부실한 콘텐츠에 일부 전시물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가 하면 서비스마저 형편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사이언스 스튜디오’와 ‘사이언스 갤러리’ 코너는 애초 시민·학생·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기획됐지만 1년이 넘도록 운영할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전체 158개 전시물 가운데 과학관 2층에 설치된 ‘빛의 굴절’, ‘미소총력’ 체험 전시물 등 상당수는 고장이 나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과학관 관계자는 전시물 시공업체가 서울·대전에 위치해 수리를 요청해도 3일이 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은 길게는 2개월가량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초·중·고교생 단체관람객 등 입장객만 1000명에 달했지만 과학관 내 매점 좌석은 90석에 불과해 변변한 쉼터도, 먹거리도 구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관람객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찾았다가 실망감이 높아지는 셈이다.

과학관이 전국 주요도시에 설립된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과 창의성을 키우고 일반인들에게 과학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전자·IT, 철강, 조선 등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등극한 것도 일찍이 과학기술과 인재를 육성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광주과학관 운영과 시설이 엉망이라는 것은 국정 목표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의 첨단 과학시설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전시행정의 산물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은편칼럼

네팔의 명문, 카트만두 대학교



박행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네팔 카트만두대학교 객원교수

되는 것’을 표방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네팔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는 것이 이 대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다.

둘째는 조직적 운영과 정확한 학사관리다. 현재 예대, 공대, 교육대, 과학대, 법대, 의대, 경영대의 7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는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업일수, 시험, 평가 등 모든 학사관리가 정확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 지금 우리에게 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네팔의 여타 대학 관리와 운용은 상당부분 유통적이다.

셋째, 부총장 선출이나 대학운영에 정치적 개입이나 학내 소요가 없음을 자랑한다. 네팔의 여러 대학에서는 낙산산 인사가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학내소요가 일어나기도 한다.

넷째, 지역사회 기여가 경영진의 철학이다. 정문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술훈련센터 2개동 입구에는 ‘네팔과 한국정부 양자협력 하에 KOICA를 통해 2014년 8월 18일 개관했다’는 동판이 붙어있다.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번역되는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약자이다. 센터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자동

차와 오토바이의 수리, 도장, 용접, 목공, 기계가공 등 기술훈련을 시켜 취업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과정 자체가 대학의 수요와 필요에 활용될 수 있어 이론과 실기가 맞물려 운용되는 두 기관의 탁월한 상생모델이다.

다섯째,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한다. 대학은 카트만두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돌리켈이라는 1500m 고지의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매연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카트만두 분지와 달리 이곳은 공기가 깨끗한 정정지역이다. 멀리 보이는 구름 위에 솟은 히말라야 설산들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대학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언덕을 올라가며 빙 둘러 건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덕 위 정점에는 잘 가운 넓직한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분부건물과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올려다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경이롭고 신비하여 탄성을 자아낸다. 이른 저녁을 먹고 한가롭게 캠퍼스를 산책하다보면 제임스 힐튼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의 샹그릴라(Shangri-La), 히말라야 유토피아가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한다. 월반이 넘는 대부분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교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은 값이 저렴하고 아주 맛있다. 초등학교부터 네팔의 모든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

금년은 한·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OICA와 대사관들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파견하여 네팔의 발전과 카트만두 대학의 인재양성을 돕고 있다. 카트만두 대학은 외부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

필자는 오늘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로 인류에게 봉사하라는 비전을 품고 카트만두 대학교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지방교육재정 위기...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장문수 광주시교육정책홍보담당사무관

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교육과정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누리과정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재원으로 지원해야 할까?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시책 사업으로, 지원근거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해야 한다.

지난달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이 맡기로 했으니 재량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라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학생 수 조정으로 학급수·교원 증가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국책사업을 위해 매년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 것은 경기호전으로 내국세 세수가 증가해 교부금 자연증가가 이뤄지던 3조원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실제 세수가 줄면서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 정산분을 감할 정도가 되었으니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즉, 정부가 예측한 대로 세수확보가 될 때까지 국회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스럽다.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내년 예산을 간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예산점검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교육복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이 절실하다.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일까?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경기를 살려 세수 확보하는 일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 하루빨리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서민경제도 좋아지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올 초 일본에서는 ‘현대의 베토벤’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청각 장애인 작곡가가 지난 18년간 돈을 주고 대리 작곡가를 써 왔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었다. 사투라고치 마모루(50)는 35살 때인 1999년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도 ‘교향곡 제1번 히로시마’ 등을 작곡, 미국 언론에 ‘현대의 베토벤’으로 소개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의 대표작 ‘히로시마’는 2008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하

수타인과의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추적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는 제대로 된 바이올린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적이 없으며 직업적으로 연주 활동을 한 경력도 없었다. 베를린 음악학교에서 수학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클링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오디션에서 떨어져 입학이 거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이 만든 바이올린을 전달한 것 말고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사실을 밝혀낸 미국인 바이올린 연주자 마크 오코너는 “스즈키의 거짓 경력이 지금에서야 밝혀진 것은 오랜 세월동안 누구도 이런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간의 근거 없는 평판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화려한 결포장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대중의 눈을 가리고 감각을 마비시킨다. 우리 주변에도 권위라는 허울 뒤에 추한 민낯이 움크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스즈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디자인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